

건설기업 체감경기 급랭... 2월 기준 7년來 '최악'

CBSI 68.9로 3.2p 하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면
이달도 상승폭 축소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급랭했다.

신규 수주는 물론 공사 착공, 공사 진행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며 '삼중고'에 빠져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에 따르면 지난달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68.9로 나타났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 뜻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92.6으로 4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CBSI는 올해 1월 72.1로 떨어지더니 2월 들어 60선으로 곤두박질쳤다. 2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계절적 비수기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저조한 데다, 코로나19의 불똥이 튀면서 지난달 신규

건설경기 BSI 추이



공사수주 BSI는 73.7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공사수주 BSI 하락에도 지난달 수주잔고 BSI는 74.4로, 전월보다 오히려 0.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건설기업들이 일부 공사 착공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특히 대형(72.7)과 중견(73.8) 건설기업의 BSI가 전월과 같은 반면 중소기업 BSI는 58.7로, 전월보다 10.7포인트 하락했다. 대형·중견보다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월 대비 5.0포인트 감소한 지방기업의 BSI(55.3)도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에 그친 서울기업 BSI(80.1)보다 감소폭이 컸다.

건설연은 올 3월 CBSI 전망치는 전

월 대비 19.6포인트 상승한 88.5로 전망했다. 봄철로 접어들면서 신규 공사수주가 계절적 비수기를 벗어나는 데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사그라지지 않으면 상승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철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3월 지수가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봄철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과 함께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실제 지수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mp@

“건설산업, 국가경제 핵심으로 재도약 ‘적기’... 협회가 선봉에 설 것”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인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재도약하려면 협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고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눈동자는 빛났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잠시간 인터뷰 내내 흐트러짐은 없었다. 평생 건설업에 몸담은 경륜에서 우러나온 탓일까.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일까. 취임 후 첫 인터뷰이지만, 물음에 대한 답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2일 공식임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제28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이날부터 4년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협회를 이끌게 된다.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취임식도 마다한 채 본바로 임무를 시작한 김 회장은 먼저 협회의 변화를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갖춘 협회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회원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안별 특별자문토 쉐치로 소통 확대 정부와 정례 간담회... 정책 선제 대응 전문성·대외경쟁력 갖춘 협회 탈바꿈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되도록 노력

간접비 보상 제도화 강력 추진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다양한 방안 강구 생산체계 개편·민간부문 활력제고 등 당면과제 해법 마련에 온힘 쏟을 것

건설산업에 있어 2020년은 전환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건설업을 흉내했던 문재인 정부도 정책기조를 달리해 건설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노후 인프라 등 앞으로 투자할 공공지원만 104조원에 달한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부·국회의원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건설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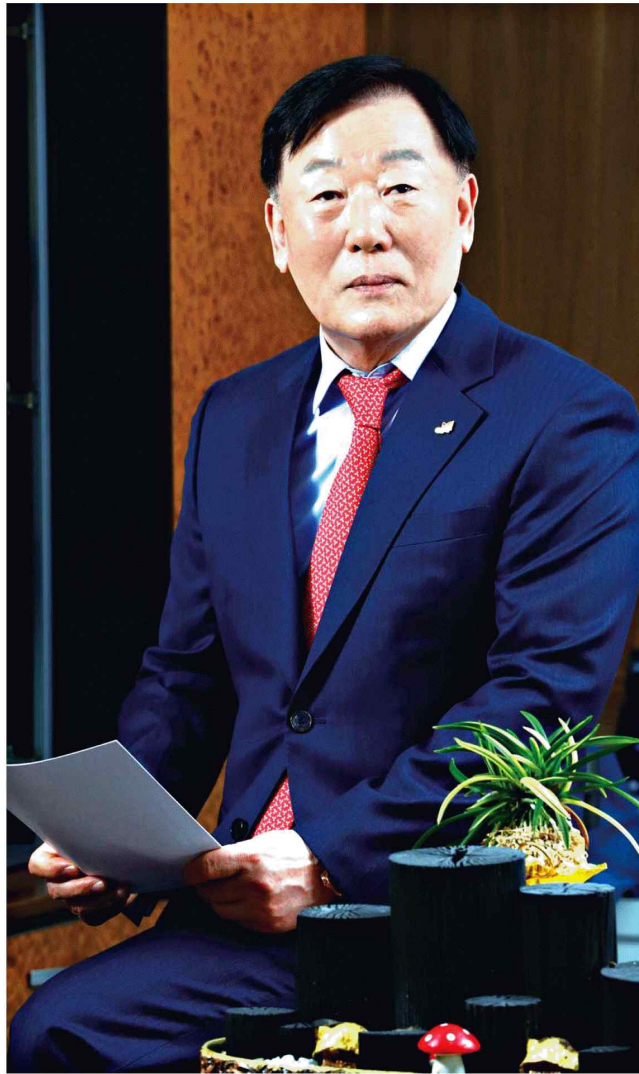
이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비롯해 민간투자 활성화, 생산체계 개편, 해외시장 진출 강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등 현재 건설산업을 둘러싼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56년을 맞은 <건설경제신문>이 비전으로 설정한 ‘다른 건설’에 대해서는 “바르면서 신뢰와 상생이 깃들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설산업계 수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947년 조선토건협회로 출범한 이래 73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단체이자 200만 건설인들의 구심점인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개인적으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현재 건설산업은 의외적으로 커졌지만,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으로 솔선수범해 건설업계의 애로와 문제점을 먼저 찾고 발굴해서 해결하겠다. 회원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도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인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려면 무엇보다 협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선 현안별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대의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



국회 및 정부와는 정례 정책간담회를 운영해 각종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해 회원 중심의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을 갖춘 협회로 탈바꿈시키겠다.

건설경기가 딱딱하기 그지없다. 특히, 종합건설사의 96%를 차지하는 중소사들은 생존까지 걱정한다.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공사 물량 확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우대 등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 물량 확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값 받기’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포함해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숙원이다.

협회는 그동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간접비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감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예산부족 유지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현행대로라면 5년짜리 공사를 50년간 해도 간접비를 못 받는다. 간접비는 공사

비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 만큼 달라는 정당한 요구다. 정부에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기준 제도화를 강력히 건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감절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기재부의 해결방안이 미진할 경우 국가계약법 개정 등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적자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도입된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차 낙찰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

공공과 달리 민간 부문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위축이 우려된다.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있다면.

주택과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 주택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은 사실상 방향을 잃고 투자의지까지 저하되고 있다. 공공만으로 국가 경제가 회복될 순 없다.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 분야에 대한 과도한 가격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는 민간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된다. 민간투자사업

에 대해서도 포퓰주의 도입, 환경개발사업 예산 면제, 민간제한 적극 수용 등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도 관심사다.

2018년 12월 생산체계 개편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업계의 이익 위주거나 아닌 종합·전문·공평한 상호 시장 진출이라는 당초 취지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 일자리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접시공 능력 제고, 안전·품질 확보,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K-건설을 다시 일으킬 방안이 있다면.

해외시장은 중동 발주물량 감소,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 등으로 실적이 2010년 이후로 급감하고 있다. 신흥국의 가격 경쟁력과 선진국의 사업관리 역량에 뒤처지면서 ‘넛코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장 점유율을 다시 높이려면 스마트인재 육성 △제도 혁신 △민관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대세인 PPP(민관합작투자사업)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 및 기획, 국제입찰, 재원조달 등 전반적인 역량을 두루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로 갈라내고 ‘알게-시공-분리’와 같은 업역구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부·공공기관·민간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적극 활용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건설업 이미지 개선도 중요하다.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은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건설사업자로서의 품위’에 맞게 국민의 신뢰와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부적격·부실업체 퇴출, 무등록시공 근절, 윤리경영 및 안전·품질 제일주의 정착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겠다.

취임일인 2일은 본지 창간일이기도 하다. 창간기획으로 다른 방식,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설을 조명하고 있다. ‘다른 건설’을 이야기한다면.

굳이 언급한다면 스바른 건설 신뢰와 상생의 건설 스마트지향적 건설 등을 꼽겠다. 바른 건설은 국가 등 발주자로부터 적정공사비를 지급받고 건설기업은 그에 맞는 품질과 성능을 갖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요, 신뢰와 상생의 건설은 발주자·시공자·건설근로자·장비업자·차체업자 등 산업 내 모든 주체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건설은 스마트한 생활환경,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건설 시설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항상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왔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작금의 어려운 시기에 저를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대의원을 포함한 전국 회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건설산업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협회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도와 주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